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2019 주요업무 보고

2019. 3. 7.(목)

정무부시장실

1. 일반 현황

1 인력 현황

○ 정무부시장실 : 정원 16명 / 현원 16명

(’19. 2월 현재)

구 분	총 계	일반직		별정직		
		6급	7급 이하	5급 이상	6급	7급
정 원	16	2	2	9	2	1
현 원	16	2	2	9	2	1

2 예산 현황

○ 업무추진비 : 197,8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197,8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시정 협력·홍보 간담회비, 직원 격려·경조사비, 사회복지 후원금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부서운영에 필요한 음료, 차, 소모품 등 구입

3 주요기능

- 대 의회·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
- 정당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 도모
- 주요 시책의 대내·외 조정 및 유관기관과 협력 증진으로 시정공감대

형성

Ⅱ . 주요 업무내용

1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생 관련 협치 강화**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시정성과 달성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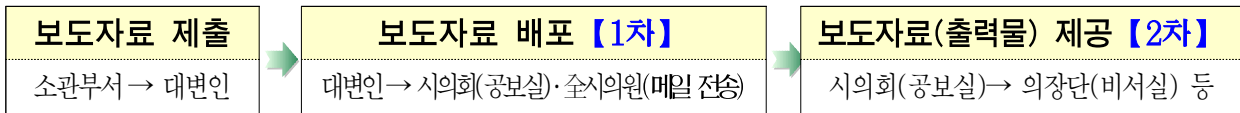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시책에 대해 시의회와 협조체계 구축
 - 의장단·당정협의회 및 상임위원회별 현안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강화
- 지역 의원과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시의원과 소통 활성화
 - 시장·정무부시장 등 시장단과 시의원(상임위별, 지역별) 간담회 지속 추진
- 시정운영 파트너로서 의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
 -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의회 - 집행부 협력으로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추진계획

[주요정책 및 추진 사업 시의회 사전 협의 강화]

- 정책 소통을 위한 시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 추진
 -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현안 논의 및 협조사항 공유 위한 간담회 개최
 - 당정협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집행부간 정책 현안 지속 공유
- 주요정책 추진 및 조례 제·개정 시 사전 설명
 - 주관부서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장단, 대표의원, 지역 시의원 등

○ 기자설명회 등 언론보도 사전 적극 공유



※ 기자설명회 및 언론보도자료 배포시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소관 상임위, 의장단, 당대표, 관련 지역 시의원 등에게 사전 설명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 지역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현안 공유

- 시의회 미개최 기간에 지역 의원들로부터 지역현안 청취·해결방안 논의
- 지역별 현안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DB화하여 지속 관리 추진

○ 시장·정무부시장과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원과의 소통 강화

- 시장-상임위원회 간담회, 정무부시장-자치구별 시의원 간담회 개최 등

○ 의정자료 전자시스템을 통한 시정정보 제공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 의원요구자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등

[주요 정책현장 방문 및 각종 행사 개최시 시의원 참여 강화]

○ 주요 시정·민원 현장 방문시

- 시장 현장방문 일정 확정 후, 지역 시의원에게 현장방문 사항 및 당일 참석 안내

○ 서울시 및 자치구 주관 각종 행사 개최시

- 착공(준공)식 및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지역 시의원 반드시 초청
- 필요시 시의원 인사말씀 기회 부여

※ 자치구의 경우, 별도 기획담당관 등을 통해 시의원 의견 매뉴얼 공유

국회 및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기반 등
우리시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 추진

□ 추진방향

- 민생현안, 지방분권 등 우리시 당면과제 관련 입법 이행 지속 촉구
- 시 핵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 및 기준보조율 차별 시정 추진
-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시기별 對국회 대응으로 우리시 현안에 대한 국회협력 강화

□ 추진계획

① 법률·제도개선 과제 입법 추진

- 국회 일정에 따른 국회 입법동향 파악 및 제도개선 과제 건의·전달
 - 정책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 의원 대상 제도개선 과제 입법 필요성 설명
 - 국회 회기 이후에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 선정 지속 건의
-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분권제도별 대정부·국회 대응
 - 지방분권 정책별 효과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한 대정부·국회 설득·건의
 - (자치경찰) 성공적 제도안착을 위한 준비 및 법령개정시 市 의견 반영 요구
 - (사무이양) 지방이양일괄법 조속통과 및 기능중심의 사무이양 지속 촉구·건의

- (재정분권) 정부 재정분권계획(지방소비세율 '19년 15%→'20년 21%로 인상 등)

이행추구

- (자치조직권) 지방정부 조직자율권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개정

지속건의

- 市-중앙부처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요 분권정책 협의 및 市 의견 개선

② 국고보조금 적극 확보 추진

- 시책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소관 실·본부·국과 협력하여 국비추가확보 역량

집중

- '20년도 국비 추가 확보 사업 반영되도록 정부 소관부처 등과 지속적 협의
- 국비확보 T/F 운영 및 사업별 전담 국회의원 매칭(서울지역 및 소관 상임위 등)

- 시 핵심사업 조기 선정하여 관계부처·기재부·국회 대상 설명 실시

-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 따른 국비 반영 내역 모니터링 추진(5월말, 8월말)
- 예산심의 과정 시, 시장단 및 소관 실·본부·국장 → 국회의원 대상 방문 설명

※ 정부 예산편성 일정

: 정부예산(안) 편성(9.3일, 기재부 ▶ 국회), 정부예산 심의·확정(12.2일, 국회)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차별 적용 시정 지속추진

- 전체 국고 보조사업 분석으로 합리적인 지원 기준(안) 제시

- 지방분권 과제와 연계하여 관심 국회의원, 관련 부처 등에 지속 건의

3 시기별 국회 대응 철저 및 소통강화

○ 국정감사·조사 대비 국회연락반 TF 운영

- 주요 상임위(행안위·국토위 등) 의원 요청사항 및 쟁점사항 파악, 분석 실시

○ 국회 협력 관계 상시 유지 및 의원 요구사항 처리 철저

- 지역 국회의원·주요 상임위원회 대상 정책간담회 수시 개최로 시 현안 공유
- 지역 민원 및 국회의원 정책 건의사항 적극적인 검토 및 회신 철저

3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대내외 조정 및 소통다양화 추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시행을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집행부 및 유관 단체와의 의견 조정 등 실시

□ 추진방향

- 주요 정책 시행 전 현장감 있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실시
- 소통 채널의 확대·다양화를 통해 소외된 시민의 의견수렴 추진
- 정책 시민공감도 제고를 위한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추진

□ 추진계획

- 정책 관련 당사자와의 사전 협력 및 소통 강화 면담 실시
 - 2019년 주요 시책 시행 전 유관단체 및 기관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장기 미해결 시민 요청사항에 대한 부서 및 민원인 합동 조정회의 추진

○ **시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 정책관심도 높은 대상 시민 우선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여 소통 강화
- 시정 관련 시민단체와 주기적 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시정 반영
- 시민 주도로 개최되는 학술대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 참석으로 교류층 확

대

○ **언론기관과 소통으로 부적절한 보도 사전 대응 및 시정정보 제공 강화**

- 주요 시정 이슈에 대한 기자간담회 개최로 시정에 대한 왜곡 보도 사전 차단
- 언론기관 포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우천시 중장기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연번	분야	과제명	관련법령
1	지분 방권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2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도시철도법
3		도시철도 노후 시설 및 전동차 교체 지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4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자치법, 기구정원규정
5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법
6	남북 교류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	경제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		규제자유특구 대상지역 확대(수도권 포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9	민생 안정	상가건물 임대료 현실화 등 임대차제도 지방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		임금체불 조사권 지방 확대	근로기준법
11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면제 대상 추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2	도재 시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범위 확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개발제한구역 내 운전면허시험장 입지조항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4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국·공유지 실효 제외 및 사유지 재산세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5		조합임원 결격사유 규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	주거 안정	혼합단지 갈등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공동주택관리법
17		주택임대차 보호 대항력 요건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18	안강 전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실화	건축법, 시행령
19	환보 경호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20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 가중치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

201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운영위원회)

정무부시장실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8	8	7	3	-
	시정·처리요구사항	4	3	1	-	-
	건의사항	11	2	6	3	-
	기타(자료제출 등)	3	3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특정인사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용역을 수주하는 등 회전문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해주시기 바람. (정무부시장실)</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3개 초과)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 연임(6년 초과)되지 않도록 규정 준수여부 관리 ○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 ○ 위촉 해제 기준을 마련하여 사익 추구, 청탁 등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위원의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시 위촉 해제 기준 마련 의무화 ○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위원회 회의록 의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전수조사(연2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회 관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7월 10일 限), 하반기(익년도 1월 10일 限)
<p>○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시범시행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친환경급식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등 친환경학교급식 희망 자치구 추가 수요조사 실시('18.10.30.~11.12.), 25개 전체 자치구로 참여 확대 ○ 시-시의회-자치구-교육청이 '19년부터 고교 등 친환경학교급식 시행을 위한 협약식 및 전면시행 계획 발표('18.11.21.)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초·중·고3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3('19년) ⇒ 고2·3('20년) ⇒ 고 전체('21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지방의원,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이미 서울시는 2010년 서울시 각 부서에 공지했으나, 여전히 자료제출시 이와 같은 사유로 자료 미제출 혹은 부실 제출이 반복되고 있으니 시정바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의원요구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및 직원 교육('18.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원·국회의원 요구자료와 관련된 법령(개인정보보호법 포함)을 정리하고 요구자료의 대상, 범위, 기한, 제출한계, 질의회신 및 법령 해석례 등을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는 요구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18.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요구사항과 요구자료 답변 부서의 곤란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부서의 의견 수렴하여 작성 ○ 가이드라인 배포 및 담당자 교육('18. 4월, 11월)
<p>○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출범한 자회사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등 정책이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므로 재차 정책의 적절성을 확인해 주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의 '자회사의 독립적이고 책임성 있는 운영 권고 지침'에 대한 사항을 투자출연기관에 안내 및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12.)」 - 자회사 경영에 대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모회사와의 소통 및 연계성은 강화 -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 모·자회사 공동협의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시행 ○ 정규직 전환 이후 노사간 소통·협력을 통해 발전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분규 조정·자문 및 노동법 관련 전문상담 제공 등을 통해 자회사 내 근로자 고충,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 다양한 노사갈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 노동협력관, 노동전문관, 공인노무사 등 활동중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의회와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람. (정무부시장실)</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단·단체장 회의를 통한 주요정책·현안 등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 시장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기 : 시장단,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 매회기 개최일 - 당정협의회(더불어민주당) : 정무부시장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기 :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민주당 대표단 / 매회기 직전 - 시장-시의원간 수시 면담 (시의원의 시장면담 요청시 수시 실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평의원과 집행부간 지속적 소통을 위해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예정('19.3.~)
<p>○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조례가 있음에도 의회와는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17.3.시행) 제정 이후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제19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로 시의회와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운영 중에 있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등 지도부와 「지역별 협의체」의 구체적 추진방안(시행시기, 구성방법, 의제 등)을 별도 협의 후 시행 예정('19.3.~)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의원들이 광역을 대표해서 뽑힌 만큼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원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기바람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부시장 면담 등을 통해 입수된 시의원 관심·요청사항에 대해 지속 관리하고, 자치구와 관계된 사항의 경우 협조 요청 ○ 자치구에서 예산 신청시 사전에 해당 지역시의원에게 사전 설명 후 신청토록 안내('18.11.22 부구청장 회의시) 완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원 관심·요청사항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관심을 갖고 시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및 부구청장회의 등 시·자치구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지속 추진 ○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구 예산 신청시 지역 시의원에게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
<p>○ 시장이 시의원들과 원만하게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주기바람 (정무부시장실)</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단·단체장 회의를 통한 주요정책·현안 등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기 : 시장단,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 매회기 개최일 - 시장-시의원간 수시 면담 (시의원의 시장면담 요청시 수시 실시) ○ 이슈사업 추진, 조례제정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 시, 당·정협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설명(협조요청) ○ 기자설명회시, 소관 상임위·의장단·당대표·관련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 ○ 보도자료는 쏘시의원에게 배포(메일 전송)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개최시 초선·여성·비례대표 의원 등 간담회 개최 대상 다양화 추진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에 의거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항은 의장단,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 등 의회 지도부와 구체적 추진 방안(시행시기, 추진방안, 의제 등) 별도 협의 후 추진 예정('19.3.~)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별정직 채용에 있어 적정 한 경력을 갖춘 인사를 채용해 주기 바람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단 보좌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은 시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면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음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비서관이나 비서 임용하는 경우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이 없고, 공고 등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또한, 별정직 보좌인력은 시민단체, 학계,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로 모두 관련분야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시정보좌를 하고 있음
<p>○ 시의원과 시장의 면담창 구를 일원화하고 면담자 료 및 결과를 데이터화해 서 시의회와 더 소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정무부시장실)</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의원 단독으로 실시하는 시장 면담은 기획담당관에서, 국회의원, 구청장이 함께 참석하는 면담은 상생협력담당관 및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면담 주제의 성격 및 참석자 등의 다양함을 고려하여 면담 창구는 현행을 유지하되, 면담 결과는 대의회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여 의회와 소통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결과 조치사항은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실시할 예정임('19. 상반기 중)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청년자치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직속기구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 일자리, 주거, 그 외에 건강, 보건의 문제까지의 문제가 전부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내용들은 전혀 다른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청년자치정부 발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청년정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어 청년자치정부의 일원화 또는 자치정부 안에서의 청년의 모든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조직을 구성해 주었으면 함 (청년청)</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에 대해서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음 ○ 청년자치정부 조직에 일자리, 주거 등 부서를 포함할지 여부 등을 조직담당관, 일자리정책과 등 관련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상반기중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일자리, 주거 등 관련부서, 전문가 등과 조직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p>○ 청년의회가 제시하는 안건이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람. (청년청)</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과제 관련 후속 실국간담회 실시(10개 부서, 13회 개최) ○ 제안과제 부서 검토결과 취합·보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청년의회 제안과제 추진현황 취합·보고('19년 상반기)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지난 10월 18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시청사에 기자회견을 하러 진입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청사방호 차원에서의 대응방법이 미숙하였음. 관련해 유감포명을 해주기 바람 (총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청사 로비는 공용재산으로서 기본적으로 청사내 기자회견은 불가하나 당일 너무 많은 인원이 고성을 지르고 혼란한 상태에서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청사 진입을 제한 ○ 몸싸움이 벌어지는 혼란한 상황에서 신체적인 접촉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시도할 겨를이 없었으며,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조차 전혀 인지 또는 인식할 수 없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온한 공무집행 및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청사방호 지속 추진
<p>○ 지난 해 3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에 보면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현안 및 예산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음. 이 조례에 명시된 협의회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의회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음. 특히, 교섭단체 대표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더 많이 해서 시의회와 협치가 좀 잘되도록 힘써주기 바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협의회 구성과 관련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17.3.시행) 제정 이후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로 시의회와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미운영 중에 있었음 ○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와는 매 회기 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수시로 대표의원실과 시 실무부서간 소통·협조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정협의회 : 정무부시장 주재 ▶ 대상 / 시기 :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민주당 대표단 / 매회기 직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등 지도부와 「지역별 협의회」의 구체적 추진방안(시행시기, 구성방법, 의제 등)을 별도 협의 후 시행 예정('19.3.~)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사회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의회가 발을 맞추어 상호 견제와 감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람 (정무부시장실)</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입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 - 조례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7조 개정하여 조례 규범력 강화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직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결정 ○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의정활동 정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실현 중점 과제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주간(매년 10.25.~31) 기념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 언론기고 및 기획보도 등을 통한 지속적 이슈 제기 ○ 대외적 지방분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공동으로 대정부·국회 건의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19.1월)으로 광역-기초 간 자치분권 공조체계 구축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청년자치정부 실현 관련 시장 방침사항 일체 (청년청)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15.)
○ 안국빌딩 신관과 구관의 임대료 비교 자료 (정무부시장실)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안국빌딩 신관, 구관 임대료 비교 자료는 서울시장 직무정지 상태에서 치뤄진 선거와 관련된 자료로서 서울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비실명 처리된 자료 실명 처리하여 제출 바람 (인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2.)